

2003. 7. 9(水)

第17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제 :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
- 한국경제의 취약성과 정책대안
- 연사 : 이수희 선임연구위원(기업연구센터 소장/경제학박사)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

- 한국경제의 취약성과 정책대안 -

<목 차>

| | |
|---|----|
| I. 실물경제로 본 한국 경제의 취약성 | 1 |
| II.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4 |
| III.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 7 |
| IV.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 10 |
| V. 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 11 |
| VI.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 13 |

1. 실물경제로 본 한국 경제의 취약성

-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이는 우리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득기반 약화 등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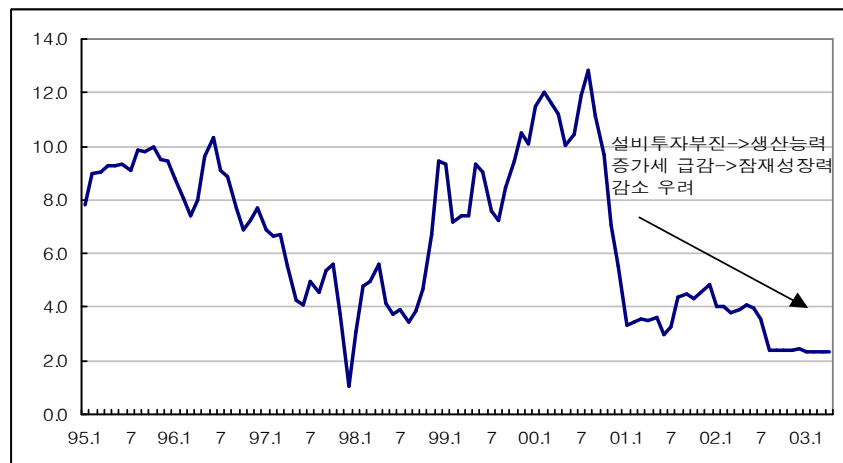
- 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 해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는 1%대로 급감
- 도소매판매는 올 2월중 19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 폭이 더욱 확대
- 실물지표의 추락으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에 이어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의 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하락

-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 1/4분기 중 3.4% 감소한데 이어 4월중에는 4.2% 감소
-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는 2001년 4%대 이하로 하락하고, 지난해 하반기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낮은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처음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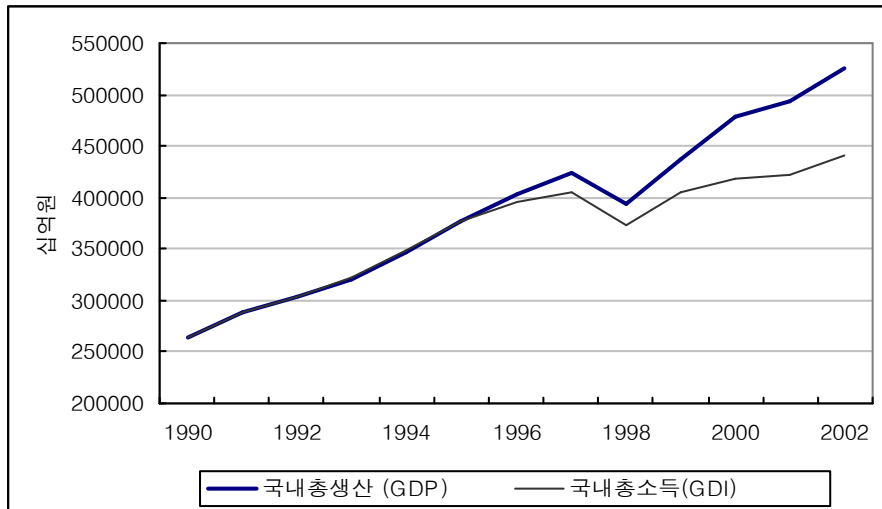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경제전체의 실질 구매력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소득기반을 약화

- 1996~2002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약 9.5%(296조원)가 교역조건의 악화로 국외로 유출되어 경제의 후생수준 감소
- 1996~2002년 기간동안 GDP성장률은 4.8%의 견조한 성장을 보였지만 국내총소득(GDI)은 연평균 2.3% 성장에 그침.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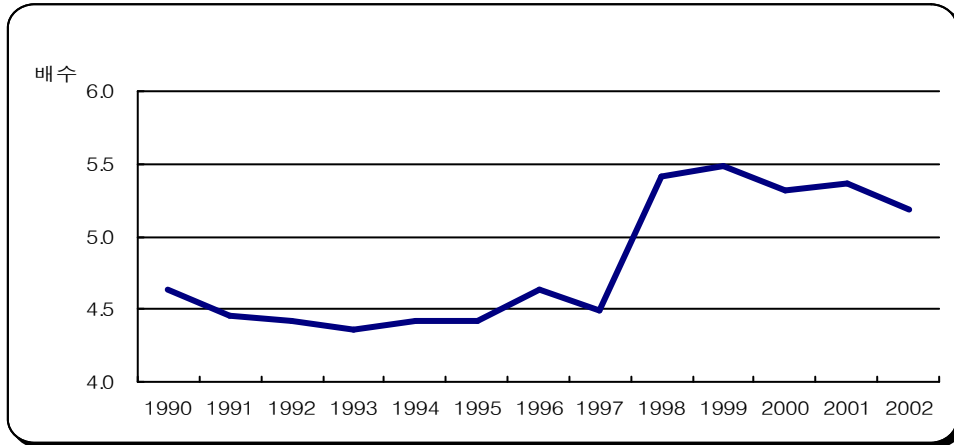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의 불안정성 확대

— 소득의 불균형 확대

-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1997년 기간에는 0.28 수준에서 머물다가 1998~2001년에는 0.3대로 크게 증가
- 도시근로자의 상위20%와 하위20%간의 소득격차는 1997년 4.5배에서 2002년에는 5.18로 확대되어 빈부격차의 양상이 확연히 드러남.

도시근로자의 상·하위20그룹간의 소득배율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 도시근로자들의 빈부격차 확대

- 상하위20%의 소득점유율이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1%p 가량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약 2.5%p 상승
- * 하위 20% : 8.3%(1997년) → 7.7%(2002년)
- * 상위 20% : 37.2%(1997년) → 39.7%(2002년)

▶ 산업의 양극화

—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격차

-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종사자수는 1991년 54.9%에서 2001년에는 63.3%로, 생산액은 1991년 68.3%에서 2001년에는 77.3%로,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1991년 66.1%에서 2001년에는 74.9%로 확대

— 업종별로 지역별로 격차 심화

-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들은 견조한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와 같은 경공업업종은 감소현상
- 또한 수출전략산업 지역인 수도권과 충북 광주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섬

유 등 전통산업이 대부분인 대구, 전남, 강원 등은 경기침체

—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일부 수출품목의 편중 현상이 심화

-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0.8%)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약 42.4%로 4배
- 상위4대품목(2002년 기준)의 수출비중이 1997년 26.4%에서 2002년에는 35.7%로 상승

II.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

— 금년 들어 생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 및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전형적인 경기하강국면 양상

- 금년 1/4분기 계절변동조정(S.A.) 실질 GDP가 전기대비로 0.4% 감소하였고, 2/4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진 것으로 판단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가 감소하는 등 경기지표 악화 지속
- 금년 초 호조세를 나타내던 건설투자도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하반기에는 둔화 예상
- 다만 물가는 4월부터 내림세로 전환되어 지속

— 향후 경기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계획이 크지 않아 취업자수 감소와 비정규직 비중 상승 및 청년실업문제 대두

-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 감소
- 구직단념자수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세 지속
-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과 함께 20대 실업문제 악화

— 향후 수출 부진 및 수출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예상

-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내수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SARS의 여파, 교역조건 악화,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과 함께, 미 달러화 약세,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회복지연 등이 예상되어 향후 수출전망이 불투명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가격경쟁력 악화 예상
- 특히, 대중국수출 부진,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및 자금조달 악화 예상

—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아직 불투명

- 카드채 문제로 인한 채권시장경색 및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지속
- 5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315만4천명으로 금년 말 400만명 예상

▶ 정책대안

— 경제위기 불감증 극복이 최우선 과제

-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한미공조관계 회복, 경기부양적 정책기조 전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시도, 서민생활안정 의지 등은 긍정적이나, 현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시장친화적 정책수립, 정부정책의 부처간 공조 부재 및 균형잡힌 정책결정 미흡
- 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정책공조 요망
-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걸맞은 합리성 견지에 노력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 모색
- 투자결정에 민감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주5일근무제, 산별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예외 및 유예 조항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한 심중한 검토 요망
-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 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며,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기부양적 정책조합 추진

-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들의 정책시차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기연착륙 유도
- 미시정책측면에서도 경직적 제도의 개선 및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기업투자활성화에 노력하고 위축된 민간소비활동 촉진
 - ※ 특소세 과세대상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조정

— 경기하강지속 여부에 따라 정책금리의 점진적 인하

- 금리조정 폭은 0.25%p 단위로 미조정하는 ‘그린스핀의 아기걸음마 방식’을 활용하여 연속 인하
 - ※ 보수적인 ECB도 지난 6월 5일 유로지역의 경기악화로 정책금리를 0.5%p 인하
-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강화
 - ※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단기적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완화

—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적자재정운용도 감수

- 현재 진행 중인 예산조기집행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되, 금년 1~4월 통합재정수지가 약 12.4조원 흑자(사회보장성기금 포함)로 나타나,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와는 달리, 사실상의 긴축재정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요망
 - ※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5.2조원 흑자
- 또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로 작년 하반기 재정지출에 비해 8.8조원이 감소하므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적게 됨.
- 따라서 만약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4.2조원의 추경예산 이외에 명목 GDP의 약 1%(6.3조원)의 재정적자도 감수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하되 중장기적 균형재정에 노력
- 법인세 및 소득세 점진적 인하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

—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모색

- 증권거래비용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0.3%의 증권거래세 등을 0.1%p 인하

III.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외환위기이후 16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며 제2금융권의 경우 더욱 심화양상
- 정부는 3.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과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어놓았으나 7월 대란설이 제기되는 등 금융불안심리가 상존
 - 지난 4월4일 금감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별 카드사 손실흡수능력(5.1조원 기적립충당금, 5조원 자기자본, 4.6조원 자본확충)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에 따라 1개월 미만(3%), 1~3개월(57%), 3개월 이상(90%), 대환대출(30%)로 예상손실률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적 손실률로서 현재와 같이 급격히 미래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의미가 없음.
- 금융시장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배경에는 공적자금의 투입 이후에도 남아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있음. 은행권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비은행권은 부실채권비율이 아직도 두 자리 수대임.
 -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비중 12%(2002년 말)
 - 저축은행의 총여신 중 1개월 이상 연체금액비중 21.9%(2003.2월말)
-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채권시장 자금이 국고채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 밖에도 은행권이 발행한 금융채의 절반이 1년 내로 만기도래할 예정이며 투신사의 잠재부실과 은행신탁의 카드채소유분 만기도래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음.

-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내경기는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고 취약한 금융 시장 구조가 노출됨에 따라 투자가들의 위험기피성은 더욱 커지고 이는 실물부분으로의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결국 시장원리가 강조되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음.
 - 이번에 정부의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정상화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며 설사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해 5조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하게 사용했어야 했음(카드채의 무차별 만기연장보다 경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 투자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

▶ **시장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단지 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저금리정책, 민간소비위주의 경기부양책 등 거시금융정책의 결과와 취약한 금융시장구조의 복합적 산물임.
-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과감한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민영화 또는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함. 특히, 추가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불식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고는 현재의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위기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적극적인 카드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시중부동자금을 장기채권상품으로 유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필요**

— 하반기에도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일부 부실사의 시장 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시중부동자금을 신탁상품이나 장기성 채권상품으로 유도하여 채권매수나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

▶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다각도의 대책 마련**

—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비롯한 중장기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시장에 공급되어야 함.

— MMF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장부평가기조는 유지하되 MMF의 운용기준을 강화

- 이미 일부 시행중이나 종목별 산업별 한도 설정하고 만기는 단축

— CP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행정보는 더욱 늘리고 투자자보호 기능은 강화

- CP는 유가증권 신고 적용예외 증권으로 발행내역을 미공개하고 있어 사고내역 관리 등 발행내역 및 정보, 가격 등에 대한 발행정보 부재로 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투자자보호의 어려움.

— 최근 대책에서는 제외되었으나 primary-CBO 발행을 통해 카드채의 차환발행을 하되 정부나 공적보증기관이 아닌 모은행 대주주나 대기업이 적극적인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길임.

— 채무자들이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환대출은 장기분할식으로 전환하되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보완되어야 함.

-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나 개인의 부채관리전략과 같은 소비자 재무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함.

IV.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결과라기 보다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단기적 결과로 판단됨.

- 최근 들어 호전된 기업의 수익성은 저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급격한 하락에 의한 결과임.

- 1999년부터 계속된 투자자금 수요 감소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므로 이는 기업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2002년 현재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2%임.
- 과거 직접금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기업의 시설자금용 자금조달도 급격히 하락하여 2002년 현재 회사채 조달액 중 시설자금용 비중은 1.14%, 그리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액 중 시설자금용 비중은 1.09%에 불과함.

▶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증대가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직접금융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은 있었으나 현재 기업금융에 있어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은 매우 부진한 상태임.

- 특히 주식시장의 부진과 단기채 중심의 회사채 시장으로 인해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의 조달은 매우 힘든 상황임.
- 따라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자금 조달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V. 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실질적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필요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 인력감축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능력은 약화되어 산업 및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 기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여건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전통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주목할 필요

-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역시 약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거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대기업 그룹의 성장잠재력 역시 약화되고 있음.

- 비교적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었던 산업분야에서도 정작 기업경쟁력은 세계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왜소한 규모에 불과
-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신성장 원천이 기대되나 아직까지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에서 과거 성장원천이었던 전통산업, 대기업 그룹의 성장동인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임.

▶ **준비되지 않은 신기술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 불가능**

- IT, BT, NT 등 신기술 산업과 부품 소재 등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원천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비해 절대열위의 기술개발투자 수준, 기술인력의 수, 고급기술인력 육성 시스템 미비로 그 미래가 밝지 않음.
- 특히 미래 신기술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이미 초기단계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한국의 경쟁우위를 담보할 수 없음.
- 기술개발역량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투자는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

▶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효과 의문, 특정산업 선별 육성의 위험성**

-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산업 집적지 형성은 기술혁신에 버금가는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나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는 추가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특정사업 편향

의 성장전략을 구사할 경우 과잉투자, 수출편중,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잉태할 것임. 한국은 이미 OECD국가 중 공업국 가운데 가장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VI.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 현재와 같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실업증대와 소득증가 둔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

- 2002년을 기준으로 평균 성장률이 2%p(예, 6%에서 4%로 낮아지면) 차이는 국민총생산이 연간 12조원, 약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의미함.
 - 위와 같은 추계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 고용구조 악화추세를 가속화시킬 전망
 - 이에 따른 소득 증가 둔화로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사회안전망 운영에 따른 복지부담은 크게 늘게 됨.
-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각종 정치경제학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정부 및 민간 분야에 걸쳐 소득 ‘파이’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각종 이해집단의 자기 몫 챙기기가 더 치열해질 것임.

▶ 저성장 탈피와 중장기 성장지지를 위한 정책운영

-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운영
 - 통화정책 일변도의 거시정책운용을 지양하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운용방식 채택
 -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나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기조절기능 제고 필요
 - 사회보장과 관련된 재정 부담의 증가는 향후 우리경제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

— 인기영합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승적 정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갈등악화와 포퓰리즘 경향이 정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설비투자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을 추구

— 가능한 방안을 망라하여 물적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장려해야 함.

-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 투명한 경제정책의 확립,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 확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 필요